

한국경제 위기재발 경계할 때



온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박사)

외 환위기를 맞이한지 5년이 되는 지금 한국경제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97년 12월 한때 39억달러로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보유액이 1100억달러를 넘어 세계 4위가 되고 시장금리가 절반 정도로 떨어지며, 99년 2월 8.7%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2%대로 복귀했다. 소유와 경영 분리, 투명성 확보 등 기업경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은행 통폐합 등 외형상 금융구조조정도 진전을 봤다. 98년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됐던 11개 공기업중 8개가 민간경영에 맡겨지고 노동시장 유연성도 이전보다 높아지는 등 공공 노동부문의 개혁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정도의 외형적 성과에 만족하고 있을 형편이 못된다. 최근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전과 닮은,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위험요인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을 내버려 뒀다간 언제든지 제 2의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국민 모두 명심해야 한다. 당장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가계 빚 급증과 해피지는 썩썩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 빚은 현재 400조원, 한 가구당 빚은 3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개인부문에서 대출이 저축을 웃돌면서 올 2분기에는 17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개인부문이 자금잉여 주체로서 기업부문의 자금부족을 메꿔온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소득이 별로 없는 대학생 등 신세대의 카드 남용으로 카드연체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카드사마다 연체를 급등에 비상이 걸려 있다. 가계 빚 급증은 단기외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소비증가가 국내상품보다 외국상품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 경상수지를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가계 소비지출중 수입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 상반기말 현재 19.5%로 지난 5년 사이에 두배 이상 높아졌다. 수입품에 대한 소비의존도의 상승은 결국 소비증가의 국내 경기 진작 효과를 줄이고 경기수축시 소비의 경기완충 역할을 축소시킴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세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던 외국 투자기관들이 가계대출 부실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계 투자기관인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 연말까지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1%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기관의 지나친 부동산 담보대출 경쟁에 따른 이같은 신용거품이 붕괴될 경우 한국내 경제적 혼란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건스탠리의 앤디 씨에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금융구조조정에서 이룩한 성과가 개인부채로 인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이 올해 6.3%에서 내년에는 4.7%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UBS워버그는 “한국의 가계대출은 그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게 문제”라며 “정부가 서둘러 억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실 가능성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는 외국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사실을 통해 “한국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 및 신용카드 부채는 5년전 아시아 경제위기를 불러왔던 ‘거품’과 다를 바 없다”며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5년전에는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가 위기를 불러왔지만 이제 그 진원지가 개인으로 바뀐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최근호에서 “한국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일본이 지난 90년대 초반에 겪었던 유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의 사치성 소비재 수입 급증은 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여행수지 적자와 더불어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허물어 뜨리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의 방만한 소비와 이에 따른 저축률 급락이 대외부문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수위를 넘은 경상수지 적자로 결국 외환위기를 맞게 된 과거 망령이 다시 떠오르는 상황이다. 성장잠재력 약화도 문제다. 외환위기 이전 2~3년간은 국내기업들이 지나칠 정도로 설비투자에 적극적이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 대부분 주력업종에서 각각 수조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것이 자본재 수입을 크게 늘려 경상수지를 급속히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생산능력 확충에는 긍정적 기여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투자부진으로 생산능력이 줄고 자본재 원자재 수입이 부진한데도 소비재 수입급증과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거품붕괴 가능성도 큰 문제다. 저금리 기조하에서 형성된 일부지역 주택가격 거품이 갑자기 꺼질 경우 일본식 불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개인 파산 증가→은행 부실채권 증가→공적자금 추가투입→정부재정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저금리 고환율은 영업외수익 개선을 통해 기업경영 실적을 호전시키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기업 체질이 약화되기도 했다. 외환위기전 금리와 환율을 가정할 경우 국내기업들은 올 상반기에 10조원 이상의 경상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금 우리는 경제의 위험 경고등을 직시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자기 분수에 맞는 절제있는 소비를 해야 한다. 한탕주의식 투기를 일삼아서도 안된다. 기업은 유리해진 경제지표의 반사이익을 향유하는데 안주해서는 안된다. 금리나 환율 등이 매우 불리하게 변하고 대내외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 견딜 수 있는 내성을 키워야 한다. 새로운 유망업종을 발굴해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경제 파수꾼이자 정책 책임자인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기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전처럼 펀더멘털이 좋다는 얘기만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안이하게 있다가 되돌아키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다시 빠질 수 있음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